

The Austrian

A PUBLICATION OF THE MISES INSTITUTE KOREA

Vol.1 Feb 2021

Special Interview
전용덕 학장



The Austrian

A PUBLICATION OF THE MISES INSTITUTE KOREA

후원 안내

정기후원: 134-125296-04-019 기업은행 (예금주) 미세스 연구소

미세스 연구소에 후원하시면 후원액에 따른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멤버십 혜택에 대한 내용은 연구소 홈페이지의 후원안내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세스 연구소는 현재 기부금 지정단체가 아님으로 기부 영수증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The Austrian

A PUBLICATION OF MISES INSTITUTE KOREA

- 3 전계운 - From the Publisher
- 4 한국 자유주의 운동의 아버지를 만나다
- 전용덕 학장 인터뷰
- 8 제프 다이스트 - For a New Libertarian
- 15 2020 - 미세스 와이어 TOP2
- 23 미세스 연구소 출간 예정 도서
- 24 ANNAUL REPORT 2020

발행처 | 미세스 연구소

발행인 | 전계운

편집인 | 전계운

부편집인 | 김경훈

디자인/레이아웃 | 전계운

연구소를 위해 기여해주신 분들

전용덕, 박형진, 김경훈, 한창헌 외
5인의 후원자 분들

미세스 연구소 (Mises Institute Korea)

Fax | 0504-401-4865

miseskorea@miseskorea.org

 allenjeon@misekorea.org

From the Publisher

전계운

“자유주의가 지닌 것은 알찬 내용과 논리적인 주장이다. 알찬 내용과 논리적인 주장이 자유주의를 승리로 이끌어가고 말 것이다.”

- 루트비히 폰 미세스 (Ludwig von Mises)

한국에서 유일한 자유와 재산권의 보루인 미세스 연구소에서 오스트리언 잡지가 첫 출간되었다. 이 사회에 국가주의와 간섭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잡지의 출간은 참으로 기념비적인 일이다. 오스트리언 잡지만큼 자유 시장과 재산권 그리고 자유에 헌신하는 급진적인 출판물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한 단어로 잘 표현해주는 것은 “오스트리언(Austrian)”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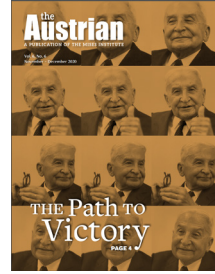


루트비히 폰 미세스(1881-1973)

위대한 자유주의 수호자 루트비히 폰 미세스가 1973년에 사망했을 당시 “오스트리언”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위대한 학자들을 지칭하는 형용사인 동시에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스트리언 놈들”이라고 경멸하는 의미로 쓰여왔었다.

그러나 미세스의 정신과 철학을 계승한 머레이 라스바드, 데이비드 고든, 한스-헤르만 호페, 론 폴 등의 위대한 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경이롭게 성장하였고 “오스트리언”은 명사로 굳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자유와 재산권을 일관적으로 급진적인 주장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오스트리언” 혹은 “오스트로-리버테리언(Austro-libertarian)”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적 및 인종과 관계없이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잡지의 네이밍을 오스트리언으로 하였다.



미국 미세스 연구소의 월간 잡지 이름 역시 “오스트리언”이다. 우리는 미국과는 다르게 오스트리언 잡지를 연간으로 출판할 것이다. 출판물은 미세스 연구소를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편을 통해 전달 될 것이고, 웹사이트에서는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다.

오스트리언 잡지에는 놀라운 만큼 알차고 급진적인 콘텐츠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각 호마다 미세스 와이어에는 올라오지 않는 오스트로-리버테리언들의 흥미로운 아이디어들, 인터뷰, 서적 리뷰, 한 해 가장 많은 추천과 조회수를 얻은 미세스 와이어 두 편 그리고 외부 기고자들의 글들로 말이다. 그리고 재정 보고서도 포함하여 미세스 연구소의 예산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마지막으로, 첫 발간사를 빌려 미세스 연구소 구성원들과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용덕 미세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님은 누구보다도 자유주의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를 알리기 위해 헌신하셨다.

매달 미세스 와이어를 통해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자유주의적 해법을 제시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켰다.

김경훈 연구원은 도처에 분산되어 있는 수 많은 자유주의적인 콘텐츠를 한 곳으로 모으고, 해외 칼럼들을 꾸준히 번역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자유주의 정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고가 컸다.

한창현 수습 연구원은 해외 장편 칼럼들을 특히 경제학과 관련된 글들을 번역하고 소개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한스-헤르만 호페 교수의 <자유주의자는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출간하는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였다.

세 분의 기여를 더 열거하자면 이 지면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미세스 연구소를 후원하는 분들의 지지와 관심 덕분에 미세스 연구소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세스 연구소가 당당히 한국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덕분이다.

오스트리언 잡지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떤 문의사항이 있다면 misekorea@misekorea.org로 연락 주시길 바란다. 다시 한번 미세스 연구소의 임무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전계운은 한국 미세스 연구소 대표이다.



라스바드 서거 21주년 기념 플로키엄&북콘서트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일시: 2016년 1월 23일 (토) 오후 2시

주최:  KHS 한국하이에크스사이언티
The Korean Hayek Society

한국 자유주의 운동의 아버지를 만나다.

"내가 추구하고자 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진리였다"
라고 말하는 **전용덕** 미세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그의 삶과 자유주의자로서 걸어온 길을 살펴보자.

1. Life

MK: 학장님께서 어떤 계기로 오스트로-리버테리언이 되셨나요? 타고나신 성향이나 삶의 모토가 자유주의적인 것이 오스트로-리버테리언이 되시는데 영향이 있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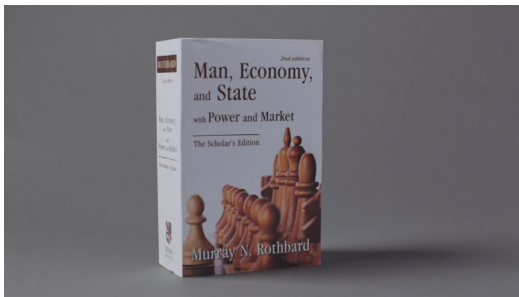
20살(1972년)이 될 때까지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일 안하면 먹지도 말라"는 것이었다. 그 때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근면, 자조, 협동'을 자주 강조했는데 나중에 그가 독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그 말은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다. 박사과정할 때 내 주위에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있어서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1989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정치권은 '대깨문'과 같은 전체주의 현상은 없었지만 당리당락을 위한 정치, 반대를 위한 반대, 간섭주의, 사회주의 등이 가득했다. 저런 정치가들과 경제참모들이 한국 경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강력한 의심이 들었다. 다시 말하면, 주류경제학에 대한 의심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나는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용덕 미세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은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자유주의 운동과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아버지로서, 전용덕 교수를 빼고 한국의 오스트리아학파와 자유주의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대표서적으로는 <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 <교육도 경제행위다>, <신분제와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 등 다수의 서적이 있다.

1991년 11월에 미제스의 Liberalism, 바스티아의 법 등을 읽었다. 머리가 한결 맑아지는 것 같았다. 그것들을 여러 번 읽었다. 이후 대우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아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을 공동으로 저술했다. 그러나 공부하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암묵적으로 좋은 경제학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다. 다수의 의문을 마음에 품은 채, 1997년 안식년을 받아 UNLV대학에서 라스바드의 인경국, 인간행동 등을 구입하거나 복사해서 한국 돌아와서 빠르게 읽었다.



인간,경제,국가 저 Murray N. Rothbard

인경국이야말로 경제이론에 대한 의문을 말끔하게 해소해주었다. 그 이후에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라스바드의 자유의 윤리 등을 이해하고 번역하는 데 집중했다. 인경국을 잘 이해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브레인워시가 필요한 책인데 그 당시 엉터리 경제이론을 많이 가진 나 같은 사람일수록 그 일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MK: 머레이 라스바드 사후에 오스트리안이 되셨는데 직접 만나보셨거나 관계를 맺은 유명한 외국의 리버테리언 혹은 오스트리안이 있으신지?

UNLV대학에서 호폐를 몇 번 만났고 한국 돌아와서도 메일을 주고 받았다. 피터 클라인도 논문에 대한 논평 때문에 몇 번 연락을 주고 받았다. 그러나 근래에는 두 분 다 연락해 본 적이 없다.



한스-헤르만 호페
미제스 연구소
특별 선임 연구원



피터 클라인
미제스 연구소
칼 멩거 특별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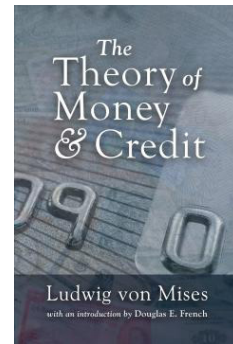
2. Austrian

MK: 최근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 입각한 경제사 연구에 집중하고 계시는데, 왜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서 다른 경제학자들이 서술한 한국경제사를 읽을 기회가 있었다. 그들의 역사 해석에 오류가 적지 않음을 발견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평소에도 역사에 관심이 많다.

MK: 지난 100년 간 세계의 모든 나라가 10-20년 주기의 경제위기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데 주류경제학, 특히 화폐-거시 부문인 케인스 경제학은 그런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류경제학자들은 케인스 경제학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위기에 대해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실질적인 설립자로 일컬어지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1912년에 '화폐와 신용의 이론'을 출간했다. 그는 그 책에서 정부가 독점 발행하는 법정 불환지폐야말로 반복되는 경제위기의 주범임을 밝혔다. 그러므로 법정 불환지폐를 폐지하고 민간 발행의 상품화폐 제도를 확립하면 될 것이다



화폐와 신용이론 저 루트비히 폰 미제스

MK: 최근의 세계적 경제위기는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이 주장에 대해 동의하나요?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경제위기는 다른 원인도 있다. 그것은 각국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인하하여 화폐공급을 크게 증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도 있다. 즉 이번 경제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화폐공급 증가로 인한 경기변동이 중첩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번 경제위기의 해결책은 과거보다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주류경제학자는 그 점을 잘 알지 못한다.



MK: 문재인 정부는 2020년의 경제위기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재정적자를 큰 폭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부채만으로도 780조 원(2020년 예상)이 훌쩍 넘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정부부채의 크기는 우리가 감당할만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정부부채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애초에 재정적자를 만들지 말 것을 제안한다. 게다가, 한국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재정적자의 부정적 영향은 더 증폭될 것이다. 그 분기점을 2020년으로 보고 있다.

MK: 근래 한국의 청년실업은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노동조합, 연공서열제에 의존한 임금 체계 등이 높은 청년실업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노동개혁은 고사하고 노동조합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제시하고 있나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노동조합은 노동자 일반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현직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임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경제 내의 모든 비노조원은 소득을 재분배당한다. 노동조합은 폐지해야 마땅하다

MK: 미국 미세스 연구소의 대표 제프 다이스트는 경제학에 뿌리를 두지 않는 자유주의자는 나쁜 자유주의자일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는 가치중립적 과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에 있어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민간의 경제행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나쁜 결과 또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설명한다. 자연히 경제행위에서도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런 철학을 가지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제프 다이스트는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MK: 다른 경제학파보다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는 방법론이나 인식론에 대해 매우 강조하는데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에서 방법론과 인식론의 중요성은 어떻게 되나요? 왜 다른 학파들은 이 주제를 무시할까요?

경제학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value free)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학이 과학이 되기 위한 두번째 조건은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이해는 경제이론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MK: 간혹 소위 자유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서 박정희의 수출주도성장 정책을 자유주의적인 정책이라는 주장하는 연구자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과연 맞는 주장인가요? 소위 “한강의 기적”은 정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정희가 시행한 모든 정책은 잘해야 간섭주의이고 사회주의도 없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저술한 ‘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를 읽으면 알 수 있다.

당시 민간들은 자신들을 위해 죽을 힘을 다했다. 민간들이 노력한 결과만 보면 그것은 분명 한강의 기적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잘못된 제도 또는 정책으로 그런 노력의 상당 부분을 허공에 날려버렸다. 박정희의 잘못된 제도 또는 정책은 민간이 만들었던 한강의 기적을 ‘한강의 보통 사건’으로 만들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결과물이 바로 한강의 보통 사건인 것이다.

MK: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금 일제강점기의 경제사를 서술하고 있다. 서술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토지조사사업, 종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예민한 주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3. Libertarian Mind

MK: 문재인 정권 열렬 지지자들은 현 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자들을 집중 공격하여 비판자들에게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이런 집단적이면서 비이성적 행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행동은 '전체주의'를 연상케 한다. 전체주의는 결코 바람직한 정치철학이 아니다. 간섭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전체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리버테리언리즘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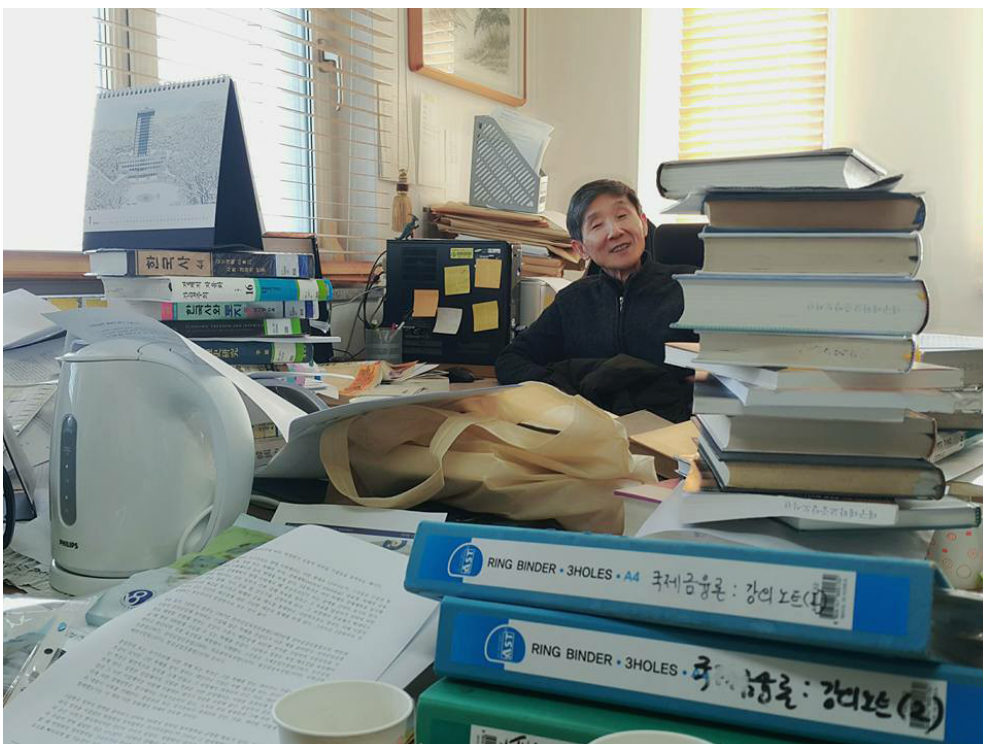
MK: 자유주의의 발상지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큰 영향력이 없는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와 리버테리언리즘이 한국에서 과연 자리를 잡을 있을지가 간혹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상 자유주의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에서, 자유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과 같이 리버테리언리즘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최선을 다해 리버테리언리즘을 스스로 교육하고 외로움에 지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리버테리언은 북극성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MK: "라스바드의 자유주의는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이론은 좋지만 비현실적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현실에 적용될 수 없는 이상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스바디안들은 자신들의 입장이야말로 진정으로 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육체와 재능의 평등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다. 즉 공산주의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라스바드의 리버테리언리즘 또는 아나코-자본주의에서 그런 비현실적인 목표는 없다. 리버테리언리즘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왕정과 민주정 하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등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상식이라고 여겨져왔던 국가주의적인 지식을 내면에서부터 부수는데 우선이군 국민의 4대 의무부터 부숴보자구! ■



"정부가 외형적으로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런 생산은 민간의 생산을 이전한 것뿐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사용하는 자원은 언제나 민간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 전용덕 미세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2017년 1월 대구대학교 연구실에서-

FOR A NEW Libertarian

새로운 자유주의자들을 위한 지침서

By 제프 다이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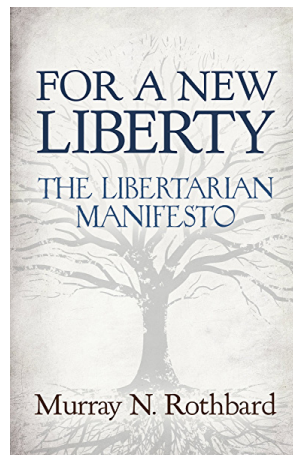


제프 다이스트는 현(現) 미국 미제스 연구소 대표이다. 자유의 챔피언 론 폴(Ron Paul)이 하원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의 보좌관으로 일했으며 론 폴의 의정활동을 도우면서 제프 다이스트는 정부의 규모와 영역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제프 다이스트는 오랫동안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사모펀드투자자들에게 조언하는 회계사로 일하기도 했다.

본 글은 2017년 미제스 유니버시티에서 행해진 연설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리버테리언리즘 그 자체보다는 리버테리언들에 대한 것입니다. 리버테리언들이 길을 잃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자유를 위하여 저 Murray N. Rothbard

이 연설의 제목인 "새로운 자유주의자들을 위하여(For a New Libertarian)"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레이 라스바드의 유명한 책 "새로운 자유를 위하여: 리버테리언 선언문(For a New Liberty: A Libertarian Manifesto)"를 연상하기를 바랍니다.

이 과소평가된 책은 아마 자유의 윤리보다는 덜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저자들이 자신의 책의 부제로 "선언문(a manifesto)"을 붙이지만, 그렇게 대담한 부제를 달고 있을 가치가 있는 책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리버테리언리즘은 정책을 추구하는 철학이다.(libertarianism, then, is a philosophy seeking a policy)"라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명언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가 오늘날의 리버테리언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공공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는지 알게 된다면 그가 이 명언을 고칠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는 "리버테리언리즘은 더 나은 리버테리언들을 추구하는 철학이다(libertarianism is a philosophy seeking better libertarians)"라고 말을 바꿀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I. 자유가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식하라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 말해보자면, 우리는 자유가 자연스럽고, 유기적이며, 인간 행동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인간상"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리버테리언들은 유토피아주의에 빠져, 자유가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며 인간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묘사하는 나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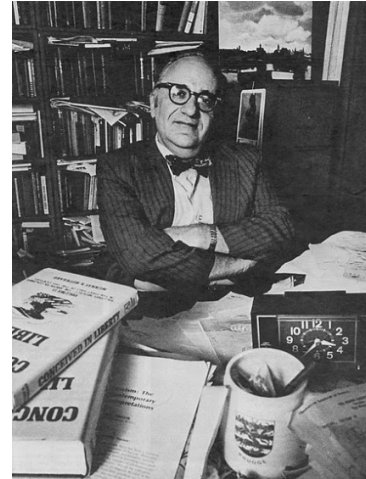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진보주의자들과 많이 비슷해보입니다. 인간이 마침내 가족과 부족에 대한 낡고 고리타분한 사상을 버리고, 순전히 이성적인 (항상 모든 것에 반대하는) 자유사상가가 되어, 종교와 신앙의 신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초인적 인간을 위하여 구시대적 윤리 또는 민족주의 또는 그것들 사이의 문화적 동맹을 깨부수어야만 자유가 통할 것이라는 생각말입니다.

그들은 물질주의를 제외하고 성적 집착과 부르주아적 가치 등의 구태의연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묘사하는 전형적인 리버테리언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일 싱가포르로 가서 직장에서 연봉을 2만 달러 더 받을 것마냥 행동하는, 거의 영혼이 없는 경제적 행위자입니다.

글쎄, 진실로, 인간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인 랜드(Ayn Rand)의 소설에서 나오는 영웅적인 행크 리어든(Hank Rearden)의 무리마냥 연약하고, 허약하고, 계층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의심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라스바드는 "새로운 자유를 위하여"의 말미에 있는 자유주의 전략에 대한 챕터에서 이런 주제에 대해 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주어진 본성이란 없으며 무한히 변화할 수 있고, 완벽해질 수 있으며, 새로운 질서의 이상적인 하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진보적인 이상주의자들의 생각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버테리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는다고 라스바드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호하는 구조에 사람들을 맞추려는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라며, 자유가 도덕적인 발전을 위한 올바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머레이 라스바드(1926-1995)

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로지 리버테리언리즘만이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스바드는 자유를 "탁월할 정도로 현실적"이라고 보았으며, 리버테리언리즘을 "인간과 세계의 본성과 정말로 일치하는 유일한 이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사회를 조직하는 데 있어 매우 실용적인 접근법으로서, 또 이용가능한 대안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적이고 자발적인 해결책으로서 최선인 것으로 이해하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거창한 비전과 유토피아를 선전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지저분하고 불완전한 세상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완벽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야 합니다.

II. 시민사회의 제도를 거부하기보다는 수용하라

저의 둘째 요점은 시민사회 그 자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버테리언들이 수십 년간 시장을 열렬하게 포용하는 동안, 가족, 종교, 전통, 문화, 시민적 제도 또는 사회적 제도 등을 적대하는 비참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리버테리언들은 시장을 제외하고는 시민사회 자체에 적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해본다면 상당히 기이합니다. 시민사회야말로 국가없이 사회를 조직하는데 필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자유와 인간본성에 대한 라스바드의 생각대로, 시민사회는 권력없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소속되고 싶어합니다. 리버테리언들은 왜 이를 무시할까요?

가족은 항상 국가에 맞서 개인을 방어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충성심의 원천이 가족이었음을, 또 그들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도 가족이었음을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접하는 최초의 공동체로서 인간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입니다. 적어도, 이상적인 형태의 가족은 그렇습니다. 가족은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반면에 정부는 우리가 원자화되고, 외로워지고, 부서지고, 취약해지고, 의존적으로 변하고, 단절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가능한 일찍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내거나, 공교육으로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복지과 세금을 이용해 꿈쩍도 못하게 만들고, 결혼과 대가족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공적인 감시로 어떤 식으로든 유대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혼을 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정을 무너트리려 합니다.

이런 주장이 지나치게 우파적인 논점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강한 가족을 원합니다. 우리는 엘리트 가족을 원합니다. 우리는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유한 가족을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대가족을 원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실현 가능한 점을 주목해봅시다. 만약 미국 인구의 10%가 합리적으로 자유를 지향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는 3,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각자 3명의 아이가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우리는 1억 명의 자유의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 역시 국가에 대항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종교의 역할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서구세계의 사람들은 높은 비율로 어떤 종교를 믿든 관계없이 여전히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것 자체가 국가의 전지전능함과 지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종교는 개인의 충성을 받는 것에 있어 국가의 잠재적인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종교를 억압하려고 해도 결코 수면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성가신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과 신앙 외에도, 거의 모든 상상가능한 이익을 위한 공동체를 제공하는 비국가적 제도는 무한히 많습니다. 기업에서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도들이 국가권력없이 사람을 조직하는 시민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중요한 점을 하나 더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더 리버테리언적인 사회가 보다 덜 방종적이고 문화적으로 더 보수적일 것이라는 믿음은 타당합니다. 국가의 중요성과 권력이 축소될수록, 오랫동안 억압되어온 시민사회의 제도들이 가진 중요성과 권력이 더 커진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더 리버테리언적인 사회에서는 자신의 생활방식과 선택에 대한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 보다 어려워집니다.

당신은 별다른 조건없이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가족, 교회, 자선단체에게 도움을 의존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 도움에 조건을 붙일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개인적 신념이나 생활방식, 혹은 선호에 대해 어떤 관심도 없고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머레이 라스바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리버테리언리즘도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리버테리언들이 시민사회를 언제나 찬미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인간이 실제로 원하며 또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즉 공동체의 형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부, 가족, 신, 사회, 도덕, 문명 등 아무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리버테리언이 아니라 허무주의자입니다.

III. 정치적 보편주의는 리버테리언의 목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사안은, 리버테리언들이 일종의 보편적인 정치적 합의를 옹호하려는 경향을 완고하게 가진다는 문제점입니다. 리버테리언들에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사람들이 자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국가의 규모와 범위, 권력을 가능한 축소하고 자기결정을 가능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리버테리언 원칙에 대한 생각은 보편적 리버테리언 정치라는 생각과 뒤섞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두자는 신조는, 문화적 요소와 종종 결합되어 보편적인 리버테리언 교리로 대체될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리버테리언리즘을 보편적 진리로서 강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리버테리언들은 종종 진보주의자 혹은 보수주의자처럼 보이곤 합니다.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지구상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합의를 지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버테리언들에게 있어서, 다른 나라에 무언가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리버테리언적이지 않습니다. 리버테리언들의 정치적 목표는 보편적 가치의 추구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급진적 옹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오콘들이 안락한 서구 세계에 있으면서 TV에 나와 시리아, 이라크, 북한, 러시아에게 무엇이 최선이며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설교를 하는 것을 듣는 것은 충분히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리즌 매거진(Reason Magazine)>의 리버테리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것은 훨씬 더 고통스러우며, 심지어 정치적 그리고 전술적 실수입니다.

오늘날의 주류 보편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민주주의 투표는 군주정 이후의 세계의 신성한 정치적 권리이다.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로 변모하여, 강력한 사회안전망, 규제된 자본주의, 여성과 소수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 그리고 기타 사회 문제에 대한 합의된 규범을 다루게 된다. 시민권에 대한 서구적 개념은 이제 모든 곳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술을 통해 우리는 국민국가의 오래된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

좌파 리버럴들은 초국민적 행정국가(단일세계정부)를 강조하는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세계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무역계획과 "민주주의의 수출"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20세기에 보여준 공통점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치적 협약이 전세계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고, 어디에서나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적어도 리버테리언들에게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보편주의는 글로벌리즘을 위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지만, 글로벌리즘이 자유는 아닙니다. 대신에, 글로벌리즘은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위협할 뿐입니다. 또한 보편주의는 자연법이 아닙니다. 사실 보편주의는 종종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진정한 다양성과 종종 대립하곤 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보편적으로 합의된 것조차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통치, 권리, 종교의 역할, 이민,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 여러 개념들에 대해 하나로 합의된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관습법 전통을 보유한 서구세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존중을 얻는데 충분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리버테리언들은 보편주의와 중앙집권화를 추진하기에 바쁩니다. 트럼프와 브렉시트는 글로벌리즘의 내러티브를 뒤흔들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민족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EU를 공격하고, 스코틀랜드, 카탈루냐, 벨기에, 안달루시아, 심지어 캘리포니아에 이르기까지 분리독립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은 갑자기 연방주의와 주들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워싱턴, 브뤼셀, 유엔, IMF 등 글로벌리즘 기관들에 등을 돌리고 싶어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메카는 파리가 아닙니다. 아일랜드인과 호주 원주민은 서로 다릅니다. 불교도와 자메이카 토착종교 신도는 다릅니다. 40대 미국인 아줌마는 러시아인과 다릅니다. 그들 모두가 철저한 라스바드주의자가 되기를 우리가 바래야 합니까? 리버테리언들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의 동성결혼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텍사스와 모나코는 동등한 국경경비태세를 갖추어야 할까요? 우리는 파리에서의 다음 번 테러를 막기 위해 텍사스와 동등한 수준의 총기법을 프랑스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치적 탈중앙화, 분리독립,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subsidiarity principle, 소단위의 법률이나 제도가 우선하고 소단위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단계에서 차상위의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률용어)'에 관심을 가지는데 시간을 더 보내는게 나을까요? 다시 말해, 몰타는 몰타인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보편주의를 거부하였으며, 자기결정권이 가장 지고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머레이 라스바드는 그가 가장 마지막에 쓴 저술 중 하나인 "동의를 의한 국가 (Nations by Consent)"에서 유기적인 국가들이 정치적 국가들로부터 이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결정권이야말로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입니다. 아무리 불안정하더라도, 자기결정이야말로 자유를 위한 길입니다. 70억명의 개인이 스스로를 완전히 지배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보다 단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독일보다는 리히텐슈타인을, 영국보다는 룩셈부르크를 선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연방화에 있어 주의 권리를 지지해야 하며, EU의 해체를 응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카탈루냐, 스코틀랜드, 캘리포니아의 분리독립운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방정부가 수도에 있는 입법부와 행정기관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것을 선호해야 하며, 따라서 다자간 무역거래를 거부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정부에 관해서는 큰 것보다 작은 것을 선호해야만 합니다.

정치적 탈중앙화, 분리독립, 보충성의 원칙, 무효화는 모두 우리를 보다 자기결정권이라는 정치적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해주는 원리입니다. 보편적인 정치적 합의를 주장하는 것은 리버테리언들에게는 매우 큰 정치적 실수입니다. 우리가 리버테리언인 이유는 세계의 75억 명의 사람들에게 최선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IV.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최근 블로거인 바이오닉 모기(Bionic Mosquito)와 나눈 이메일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바이오닉 모기를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에게 여러분들 위해 가상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울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유주의자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물리적으로 싸울 것입니까? 이러한 싸움은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체포 당해서 감옥에 가거나, 재산, 집, 소유물을 상실할 위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물리적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혹은 가족이 공격당하면 싸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가까운 친구나 이웃을 위해서도 싸울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는 완전히 낯선 사람을 위해서 물리적인 방어력을 행사할지도 모릅니다. 예컨대 노파가 강도를 당하고 있다면 말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을과 지역 사회의 모든 이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더라도, 외부 세력에 의해 물리적으로 침략당한다면, 아마도 마을과 지역 사회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재산을 위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싸우지는 않더라도요. 우리는 확실히 집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지만 집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차는 어떠한가요? 차를 몰고가던 중 무장강도를 만나면 물리적으로 싸울 것인가요? 아니면 죽음이나 부상의 위협을 감수하지 않고 그냥 차를 주고 넘어갈 것인가요?

지갑의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정부가 그러하듯이, 누군가 소득의 40%를 가로채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를 막기 위해 무기를 들 것인가요?

확실한 점은 우리가 비트코인, 망 중립성, 혹은 양도소득세의 인상을 위해 싸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조국", 자유, 혹은 종교같은 추상적인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어떠한가요? 이러한 주제는 더 막연해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상적인 것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왔고 또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직접 싸우고 있는 병사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전장에서 그들의 동료를 위해서, 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의무감을 채우기 위해서 싸운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민족, 조국, 신, 그리고 국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리버테리언들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이런 요소들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가장 HOT 했던 미제스 와이어 TOP 2

Top 1

대한민국의 수출주도 및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실패했다.



Mihai Macovei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제분석가
- 루마니아 미제스 연구소 연구원

- 원문: South Korea's Neo-Mercantilist Growth Engine Has Stalled
- 번역: 김경훈 연구원
- 조회수: 1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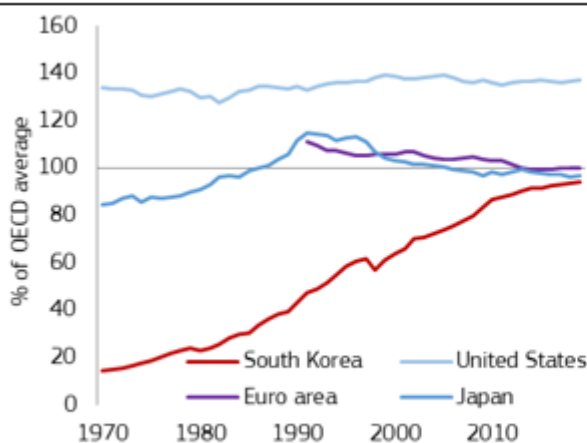
자본 축적과 생산성 증가는 자유시장 투자의 결과이며, 정부지출의 결과가 아니다. 이 점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이 밝혀낸 사실 중 하나이다. 머레이 라스바드에 따르면, 자유시장만이 생산 요소의 효율적인 배분을 보장하며, 정부의 투자는 "과오투자를 창출하거나, 전혀 투자라 말할 수 없고 그저 자산을 낭비할 뿐" 이다.

또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곧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덜 원하는 방향으로 생산을 이전시키는 것이며, 결국 노동생산성과 생활수준의 하락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이론이 필요하다. 한국은 국가 주도의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켰으나, 마침내 그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경제성장의 밝은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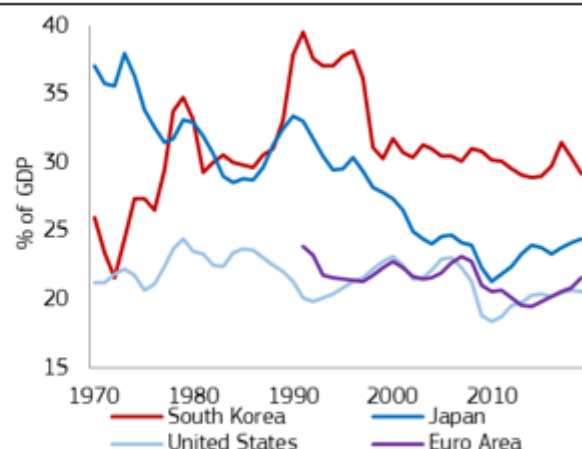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은 중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 경제로 성장할 수 있었다. PPP(구매력평가지수)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에 거의 근접한다. (그래프 1) 또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수십년 동안 연간 7~10%의 급격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 성장은 매우 높은 투자율에 의해 촉진되었다. 한국의 투자율은 1990년에 역대 최고수치인 GDP 대비 40%를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평균적으로 GDP의 32% 를 차지하는 투자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프 2)

Graph 1 – GDP per capita at constant PPP



Source: OECD Economic Outlook

Graph 2 – Investment rate in GDP



Source: OECD Economic Outlook

한국이 2017년 기준 세계 5위의 공산품 수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중대한 원인은 급속한 산업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the global value chains)'로의 긴밀한 통합에 있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공 뒤에 적극적인 국가적 산업정책이 있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보조금, 무역 및 투자 장벽 통해 정부가 삼성, 현대, LG, 기아, (지금은 파산한) 대우 등 소위 '재벌'로 알려진 일련의 대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라이언 맥마켄(Ryan McMaken)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정부-기업 '협력'의 이면에는, 한국인들이 놓친 수 많은 '보이지 않는' 경제적 기회 역시 존재했었다. 다르게 말하자면,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과 정부의 대기업 편애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한국 경제성장의 어두운 측면 1: 생산성과 소비의 감소, 성장의 둔화

경제성장은 대체로 국가가 부유해질 때 둔화된다. 그러나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약 7-8%에 머물렀으나, 현재 3% 이하로 매우 갑작스럽게 하락했다. '잠재적 산출(potential output)' 역시, 매우 높은 투자율에도 불구하고 자본 축적 및 '총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둔화로 인해 폭락하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매우 빠른 GDP 성장률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OECD 국가 상위 절반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았고, 노동생산성 역시 46% 가량 낮았다. (그래프 3) 이러한 격차는 더 많은 근로시간에 의해 메꿔진다. 한국인들은 OECD 평균보다 15%, EU 평균보다 30% 더 많이 일한다.

보다 많은 근로시간의 대가로, 한국인들은 GDP 수준 대비 낮은 임금과 민간 소비에 머무르고 있다. 199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OECD 평균의 43% 수준에서 94%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지만, PPP 기준 평균 임금은 OECD 평균의 59% 수준에서 85% 수준으로 훨씬 느리게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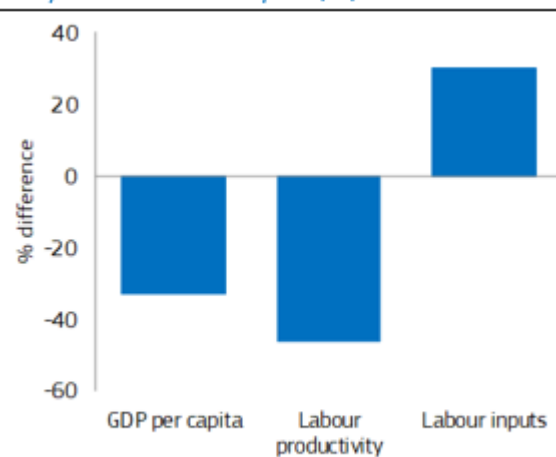
이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약화되고 있는 점과 일치하며, 국가가 부여한 재벌기업의 독점력, 매우 경직된 노동시장, 그리고 고용안정을 대가로 임금성장을 침체시키는 비효율적인 임금 모델을 반영한 결과이다.

국내총생산에서 '노동 급료(labor compensation)'의 비율은 53%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가계의 '순 가처분 소득(net disposable income)'은 꾸준히 감소해왔으며, 2018년 기준 GDP의 약 50%였다. 같은 시기 미국과 유럽은 각각 GDP의 약 75%, 60%에 달했다.

임금이 매우 압박받는 것 외에도, 높은 수입 관세와 제한되는 국내 기업간의 경쟁 탓에 민간소비가 타격을 받는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내소비는 GDP의 48%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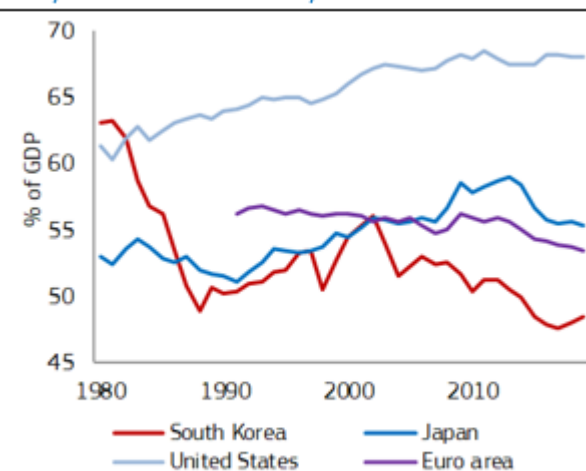
(그래프 4) 가계소득이 GDP 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소비와 주택 매입은 갈수록 신용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2019년 기준 GDP의 92%에 육박하며,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Graph 3 – Korea vs. top half of OECD countries



Source: OECD Economic Outlook

Graph 4 – Private consumption in GDP



Source: OECD Economic Outlook

한국 경제성장의 어두운 측면 2: 비효율적인 자원분배

주류경제학 성장이론에 따르면, 한국은 투자율이 매우 높고, 근무시간이 극도로 길며, 연구개발(R&D) 투자가 최고수준(2017년 기준 GDP의 4.6%)이므로, 여전히 고도로 성장하는 모범적인 국가여야만 한다. 분명 한국은 자본과 노동의 양적인 활용에서는 뛰어나다. 그러나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오직 자유시장만이 생산요소를 가장 생산적인 용도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 불행하게도, 한국의 경우 노동 및 생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매우 심각하여 자원분배의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생산시장 내에서의 경쟁의 제한, 그리고 경쟁의 승자를 정부가 선택하는 것이 한국 경제성장 정책의 본질적 특징이었다. 한국 정부의 보호주의는 무역과 투자에 있어 거대한 장벽을 세웠고, 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2019년 기준, 한국은 세계 경쟁력 지수에서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하여 우수한 모습을 보였지만, 대조적으로 관세 개방도에서는 91위, 비관세 장벽에서는 70위에 머물렀다.

마찬가지로, 2018년 기준 국내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지분에 있어 EU는 GDP의 55%, 미국은 GDP의 36%를 기록했으나, 한국은 14%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은 FDI의 순수출국이라 할 만한데, 국외 FDI 수치가 무려 GDP의 22%에 달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에 대한 예산 보조금은 OECD 평균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지나치게 확대된 재벌체제의 비효율성이 너무 명백해지자, 정부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분야를 축소함으로써 기업간 수준을 평준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기득권 재벌에 의해 시장 자유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정부의 지원은 대신 중소기업을 주된 타겟으로 설정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및 기타 재정 보조금 지원, 낮은 세금 혜택, 공공사업 조달에 대한 특혜 부여, 특정 사업영역에 대한 독점적 특권 등의 방법으로 지원이 행해졌다. 그 결과, 재벌과 중소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영역은 정부에 의해 서로 구별되고 엄격한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한국의 생산시장 규제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엄격한 수준으로 자리잡았다.

노동시장 규제 역시 매우 경직된 상황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 매우 비효율적으로 변모하였다. 노동시장 유연성, 정리해고 비용, 채용 및 해고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 2019년 세계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100위에 불과하였다. 한국 노동시장은 엄청난 규모의 비정규직 비중과 함께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데, 이는 타이트한 규제에 의한 비효율을 상쇄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전체 고용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OECD 국가 평균은 11%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6%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받는다. 대기업은 보수가 좋은 정규직을 보장하지만,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매력 없는 일자리에 비하면 그 수가 턱 없이 부족하며, 중소기업은 언제나 노동력 부족에 시달린다.

이는 교육적 불일치와 함께 매우 저조한 청년 고용률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 조치가 대개 그렇듯, 한국정부 역시 비효율적인 성장과 소비 침체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증상만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2017년에 새로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을 재분배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였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최저임금을 30% 대폭 인상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으며, 공공고용을 약 40% 이상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특히 미-중 무역전쟁 이후 외부 수요의 현저한 감소와 함께,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고용성장은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감소로 인해 눈에 띄게 둔화되었고, 주로 공공 부분과 상당히 불안정한 시간제 직종에서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소득재분배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의 증가 역시 2019년에 들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출과 회사 이전으로 인해 민간투자는 6분기 연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7년의 3.2%에서 2019년의 2%로 하락했다.

더욱이, 소득주도성장은 엄청난 비용을 소모하였다. 2018년의 예산수지는 GDP 대비 2.6%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오히려 1.4%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 역주: 한국의 대졸자 비율은 90% 수준이며, 과도한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졸자가 중소기업 일자리를 기피하게 되었다.

한국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처방

한국이 지속가능한 잠재적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배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정부 보호에 더 이상 엄매이지 않고,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배분을 자유시장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오직 이 방법만이, 진정한 자본 축적과 높은 노동 생산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격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시장-설정 임금 (market-set wages)'을 가능하게 한다. 생산은 소비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소비 일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한국인들에게 더 나은 생활 수준과 노동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의 사례는, 정부가 기업에 간섭하는 것이 사람들을 더 가난하고 덜 만족스럽게 만든다는 미제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충분한 근거이다. 미제스의 말을 빌리자면:

정부가 생산의 한 부분을 촉진할 때, 다른 부분은 반드시 축소된다. 그렇지 않고선 정부는 특정 생산을 장려할 힘이 없다. ... 정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나는 대놓고 그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종의 위장술인데, 수입 관세를 제정하는 것이다. ...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정부의 그런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더 높게 평가하는 일부 만족을 포기하게끔 강요하고, 그들이 덜 가치있게 여기는 만족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인간행동, 원서 p. 737)

2020년
미제스 연구소
추천도서



"대한민국의 수출주도 및 소득주도 경제 성장은 실패했다"에 대한 전용덕 학장님의 논평

1. 한국경제에 대한 해당 칼럼의 지적은 대체로 옳다.
2. 그러나 첫 문단의 마지막, "한국은 국가 주도의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켰으나, 마침내 그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사료된다. (South Korea, whose growth model driven by state-led and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appears to have reached its limits.)" 이 문장은 엉터리이며 틀렸다.
3. 한국은 국가 주도의 수출지향적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성장시켰다. 다시 말하면, 국가 주도의 산업화로 많은 비효율과 자원 낭비(경기변동 등에 의해)가 발생했지만 그것을 크게 능가하는 민간의 자본 투자, 저축,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투입, 높은 교육(이것은 개인 차원에서 자본을 투입하는 것임), 기업가들의 도전정신(반도체 투자, 조선업 투자 등) 등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초래했다.
4.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라졌거나 반대로 가고 있다. 심지어 공유경제와 같은 혁신은 꿈도 꾸지 못한다. 여전히 2% 정도나마 성장하는 것은 정부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5. 화폐는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아도 더 엉망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학장님의 저서 <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를 참조★

Top 2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자유주의는 왜 함께 가는가?



Chris Calton

- 미국 미세스 연구소 2018년 연구원
- 경제사학자
- 원문: Austro-Libertarianism as a Meaningful Phrase
- 번역: 김경훈 연구원
- 조회수: 327

'오스트리아학파-자유주의(Austro-Libertarian, 이하 오스트로-리버테리언)'라는 용어는 개념상 전혀 관련이 없는 두 가지 범주를 동시에 내포한다. 한편으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결과에 대한 가치판단 없이 경제현상의 인과적 규칙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반면에, '자유주의'는 주어진 수단과 목적에 대하여 특정한 가치판단을 내리는 윤리철학이다. 그렇다면, '오스트로-리버테리언'이라는 순서의 배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주의가 가지는 정치적 가치판단은 이 개념에서 우선시되지 않는다. 오스트로-리버테리언들이 자유주의 철학에서 유도되는 정치적 함의를 분명히 따름에도 말이다.

이미 여러 사상가들이 지적한 바 처럼,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자유주의자이지만, 모든 자유주의자가 오스트리아학파를 따르지는 않는다는 개념적 불일치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인 동시에 자유주의자인 많은 학자가 '오스트로-리버테리언'이라는 상표를 비판한다. 그들은 오스트리아학파와 자유주의 중 어느 쪽도 개별적으로 반대하진 않으면서도, 그 둘이 하나의 개념으로 결합하는 것은 거부한다. 이는 미세스의 추론, 즉,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가치중립적 과학(value-free science)'이며, 반대로 자유주의는 여타 모든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가치지향적(value-oriented)'이라는 차이점에 근거한 비판이다.

물론 그러한 지적은 옳다. 심지어 도덕적 자유주의의 귀감을 보여준 머레이 라스바드조차도,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이 가치중립적 과학임을 인정했다. <권력과 시장>에서, 라스바드는 "인간행동학(경제학)은 궁극적인 윤리적 판단을 제공해줄 수 없다. 인간행동학은 윤리적 판단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해줄 뿐이다." 라고 주장하며, 윤리학에 대한 인간행동학적 비판을 설명하기 위해 한 장을 할애하기도 했다.

이는 미제스가 <인간 행동(Human Action)>에서 강조한
효용주의(공리주의적) 접근법과 일치한다:

윤리적 교리의 목적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며, 또 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가치 척도를 정립하는 것이다. 모든 윤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리는데 있어 자신이 최고선으로서, 인간이 무엇을 목표로 해야하는지 충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ought to be)'에 대한 인식을 목표로 하는 '규범적 학문(ormative disciplines)'이다. 윤리는 사실에 대하여 중립적이지 않으며, 자유로이 자신이 선택한 관점을 표준으로 삼아 사실을 판단한다.

이것은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의 태도가 아니다.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은, 인간 행동의 '궁극적 목적(ultimate ends)'이 어떤 절대적 기준으로부터 판단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으로 주어진 것(ultimately given)'이다. 그것은 순전히 주관적이며,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의 삶의 다양한 순간에서 서로 다르다.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이 다루는 것은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단이다.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은 사치와 금욕 중에 무엇이 더 나은지와 같은 가치판단의 문제에 대하여 어떤 의견도 표명하지 않는다. 인간행동학과 경제학은 행위자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수단이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하나의 척도만을 제공한다.

미제스는 모든 도덕적 판단과 별개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the laws of cause and effect)'은 언제나 보편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람들이 '주어진 목적(given ends)'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수단을 활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경제학자의 역할이다. 그러한 목적 자체가 어떠하다는 가치판단은 윤리학자들의 몫이다.

요약하자면, 경제학자들 역시 개인적으로 원하는 윤리적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의 도덕적 판단과 현실 세계의 인과관계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 윤리가 경제학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자인 동시에 자유주의자인 많은 사람이 '오스트로-리버테리언'이라는 용어 결합에 왜 반대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머레이 라스바드는 '오스트로-리버테리언'이라는 상표를 채택했는가? 그는 훈련된 전문 경제학자로서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의 가치중립성을 누구보다도 충분히 인식하지 않았는가?

미제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과학자와는 달리, 라스바드는 윤리학을 과학적 연구 분야의 정당한 일원으로 취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자, 특히 사회과학자들은 '객관성(objectivity)'을 추구하기 위해 윤리를 내던졌지만, 라스바드는 윤리를 소홀하게 여긴다면 진정으로 객관적인 과학적 연구는 훼손된다고 믿었다. <과학의 기초, The Mantle of Science>에서, 라스바드는 이렇게 말했다:



합리적(rational, 즉 넓은 의미에서 '과학적') 윤리가 가능하다는 고전철학의 견해는 대부분 폐기되었다. '가치중립(Wertfrei, 과학이 가치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는 명목으로 합리적 윤리가 과학과 별개의 학문이라고 일축해온 비판자들이 만연해진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임의적이고 특별한 윤리적 판단을 여러 인간과학에 몰래 주입하게 되었다.

최근의 유행은, '가치중립성(Wertfreiheit)'의 '겉모습(facade)'을 보존하면서, 과학자 자신의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대체로 공유하는 특정한 가치판단을 무심코 채택하는 것이다.

즉 그런 과학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진 않지만, 사회 대다수가 공유한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채택하면서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대략 추측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과학자가 자신의 가치를 제시하는 것은 편견에 사로잡혔으며 객관적이지 않다고 간주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구호를 무비판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객관성'의 극치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의 과학적 객관성은 더 이상 그것이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별로 유식하지도 못한 다른 사람들의 주관으로 가득찬 여론조사 결과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 분야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치 판단의 예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흔히 쓰이는 '긍정적(positive)' 그리고 '부정적(negative)'이라는 개념이 그러하다. 이는 좋음과 나쁨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가정하지 않고선 사용될 수 없는 용어이다.

특정한 '외부효과(externality)'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치 판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의 논문 "공공재 이론과 치안 생산이론의 실패(Fallacies of the Public Goods Theory and the Production of Security)"에서, 한스-헤르만 호페는 유사한 논지로 공공재를 비판했다:

시장에 맡겨두면 생산되지 않을 공공재를 국가간섭을 통해 제 공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론 과정에 특정한 규범을 은밀히 끼워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상품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로부터, 이러한 상품들이 무조건 생산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규범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공재 이론가들은 실증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한계를 분명히 벗어났다. 대신에 그들은 도덕 혹은 윤리의 영역으로 옮겨간 것이다. 따라서 공공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정당하게 행하고 또 원하는 결론을 정당하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학문(cognitive discipline)'으로서의 윤리학 이론을 제공받기를 기대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많은 사회과학자가(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객관성에 대해 그들 스스로 선언한 가치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단(means)'과 '사실(is)'에 대한 학문으로서 인간행동학이 본질적으로 가치중립이라는 미제스의 개념을 부인하지 않는다.

라스바드는 <과학의 기초>에서 윤리학과 양심에 대한 연구를 요구한다. 외부효과와 공공재 등 부패한 이론들이 의도치 않게 가치 판단을 내리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말이다.

상기한 통찰은, 윤리에 적합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을 경우, 경제학 분석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치 판단이 의도하지 않게 채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건전하게 성립된 윤리학이 경제학 분석을 강화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스트로-리버테리언리즘에 있어서, 관건은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이 어떻게 자유주의 윤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냐는 점이다.

라스바드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스트로-리버테리언리즘이라는 개념이 의미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권력과 시장>에서 라스바드가 쓰기를:

인간행동학은 경제학의 영역을 넘어서 윤리적 목적을 비판하는 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행동 과학의 가치중립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상기한 주장은 단지 윤리적 목표조차도 인간행동학의 유효한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인간행동학은 (1) 윤리적 명제의 공식화에 있어 내포된 오류의 존재를 지적하고 (2) 윤리적 명제가 설정한 목표 자체의 가능한 무의미성과 내면적 불일치를 비판할 수 있다. 이 두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자기모순적이고 또 개념적으로 달성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윤리적 목표는, 분명히 불합리한 것이며 모두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윤리적 평가의 무한한 타당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¹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윤리학자로 기능하면서도 인간행동학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긍정적인 윤리 체계를 세우려고 시도하지 않고, 심지어 그러한 체계가 달성될 수 있다고 증명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인간행동학이 개념적 가능성 혹은 내적인 일관성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는 윤리적 명제들을 폐기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라스바드는 자본주의가 초래했다는 결과를 근거로 자유시장을 거부하는 많은 윤리적 반대 명제들을 계속하여 나열한다. 라스바드는 '가치로 가득찬(value-laden)' 도덕적 반대들이 인간행동학의 가치중립적 응용을 통해 즉각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행동의 가치중립적 과학으로서 경제학이 "우리 자신의 긍정적인 윤리 체계의 확립"에 사용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의 도덕적 판단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²

라스바드의 지적은 자유주의 윤리의 '비-침해성(non-aggression)' 체계 밖에서도 여전히 사실이다. 예컨대, 경제적 번영과 평등주의 모두를 도덕적 선으로 간주하는 제안은,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가 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평등주의 원칙이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한 계층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들을 남겨두어야 할 '단서(proviso)'를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간행동학은 그러한 철학에 내재된 모순을 폭로하는데 기여한다.

1. 역주: 대체로 윤리적 주장은 '취향 중중'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즉, 그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또 (부정적 의미에서) 이상적인지와 별개로, 윤리적 주장들 사이의 평가 기준이 없으므로 모두 공평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스바드는 경제학, 혹은 인간행동학의 도구를 통해서 윤리적 목표의 내적인 논리정합성과 목표의 이론적 성립가능성 및 실현가능성 따위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테스트를 통과한 윤리적 주장만이 타당하다고 여겨져야 한다고 말한다.

2. 역주: 윤리 체계는 당위에 대한 것이다. 경제학은 사실에 대한 것이다. 사실에서 당위를 추론해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경제학적 사실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는 윤리 체계를 확립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특정한 윤리 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경제학적 사실을 고려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한 사실과 충돌하는 당위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거나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이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가치중립적 분석을 통해, 평등주의와 번영은 서로 충돌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인간행동학이 개념적 가능성 혹은 내적인 일관성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는 윤리적 명제들을 폐기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는 라스바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롤스주의 윤리는 인간행동학이 가치중립적 과학이라는 미제스의 단언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거부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학파 방법론에 따라 적절하게 연구된 경제학은, 우리의 윤리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자유주의자라서 오스트리아학파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오스트리아학파를 공부하고 따르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해보자면, 우리의 자유주의는 분명 윤리적 가치판단으로 가득찬 명제의 집합이지만, 인간행동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초하며 옹호된다.

오스트로-리버테리언리즘에 대한 비판가들은, '학제간 영향력(interdisciplinary influence)'이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다는 암묵적인 믿음, 즉 자유주의가 경제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혼란에 빠진 것이다. 비판가들과 대조적으로, 라스바드는 두 가지 극히 중요한 사안을 인식했다.

첫째, 윤리학 연구를 게을리하는 사회과학자들은, 그들이 분석함에 있어 도덕적 명제를 은밀히 적용할 때 그 실수를 인지할 방법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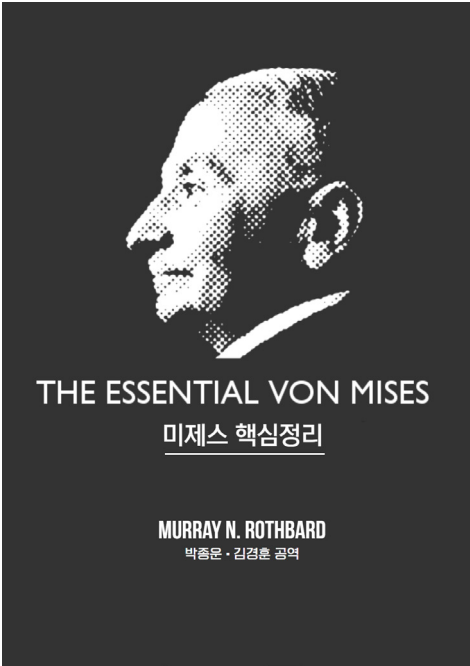
둘째,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역사학, 경제학, 그리고 다른 모든 인간에 대한 학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라스바드는 마찬가지로 윤리학의 필수적 연구에도 오스트리아학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스트로-리버테리언들의 신념이다.

Austro – Libertari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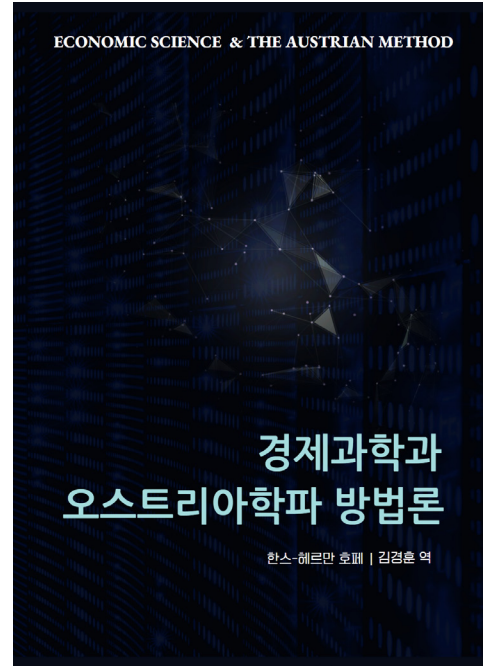


NO SUPPORTER OF THE FREE MARKET CAN LOOK AT MILITARY PROCUREMENT AND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IN ANY DETAIL WITHOUT RECOILING IN UTTER DISGUST

2021년 미세스 연구소 출간 예정 도서



- 원제: The Essential von Mises
- 제목: 미세스 핵심정리
- 저자: 머레이 N. 라스바드
- 출판년도: 1973 | 2021
- 페이지수: 15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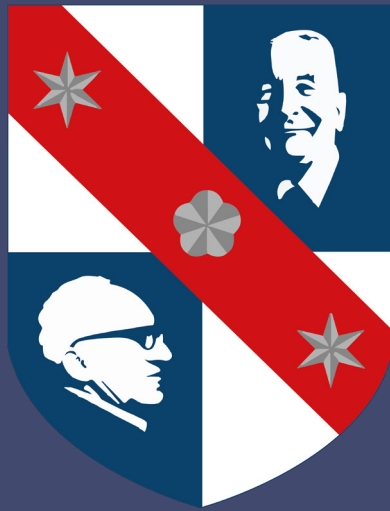


- 원제: Economic Sciece and The Austrian Method
- 제목: 경제과학과 오스트리아학파 방법론
- 저자: 한스-헤르만 호페
- 출판년도: 1995 | 2021
- 페이지수: 160p



- 원제: Anatomy of the state
- 제목: 국가의 해부
- 저자: 머레이 N. 라스바드
- 출판년도: 1974 | 2021
- 페이지수: 80p

- 출간 예정 도서 후원시 책 첫장에 Donator명을 새겨드립니다.
- 출간 예정 도서 후원 문의 miseskorea@miseskorea.org
- 출판 및 편집 과정에서 페이지수는 변동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NUAL REPORT 2020
MISES INSTITUTE KOREA

PRESIDENT'S REPORT

미제스 연구소의 창립자인 류 락웰(Llewellyn H. Rockwell, Jr.)씨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1982년 미제스 연구소를 설립했었을 때 미제스의 부인 마르그리트씨가 열성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전과 큰 책임감에 직면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자유시장 사상을 마르그리트씨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홍보할 수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이 질문에 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역사가인 머레이 라스바드에게 새 연구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는 기뻐하면서 박수를 쳤고 흔쾌히 아카데미 부학장을 맡았습니다. 이 일만큼 나를 기쁘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전계운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머레이를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머레이의 위대한 작품인 <인간, 경제, 국가>를 두고 인간행동(Human Action), 인간행동학(Praxeology)의 일반적인 과학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사실상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정교한 경제학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저는 미제스의 경제학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라스바드를 가이드로 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제스가 왜 머레이를 훌륭한 제자이자 후계자로 여겼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머레이는 경제, 역사, 철학, 정치 이론, 그리고 수많은 다른 주제들을 막힘 없이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머레이는 상아탑에 속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자유에 헌신했고 약탈적인 국가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금본위제를 회복하고, 연준을 폐지하고 비(非) 개입주의 외교정책으로 회귀하길 원했습니다. 그는 경제학에서 타협 없는 자유시장을 선호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합니다.”

저 역시 지난해에 미제스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도전과 큰 책임감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왜곡되지 않은 그대로의 자유주의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를 대중들에게 홍보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락웰에게 라스바드가 있었듯이 저에게는 라스바드처럼 비타협적인 길을 고수해온 전용덕 학장님이 계셨습니다. 학장님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이론 응용을 통해 한국 역사를 오스트로-리버테리언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큰 업적을 남기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앞으로 미래와 그리고 과거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제스와 라스바드가 남긴 유산과 그리고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후대 학자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글들과 논문, 영상들을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웹페이지나 유튜브, 미국 미제스 연구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유산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 논리의 정교함과 일관성, 건전한 윤리 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행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를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원인을 진단할 수 없음은 물론, 10~20년 주기로 찾아오는 경제적인 고통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고, 자유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미제스 연구소는 자유의 거인들이 남긴 유산을 한치의 왜곡 없이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미제스 연구소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일의 시작을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훌륭한 기부자들의 관심과 지지입니다. 항상 마음 깊숙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Allen

MISES
INSTITUTE

MISES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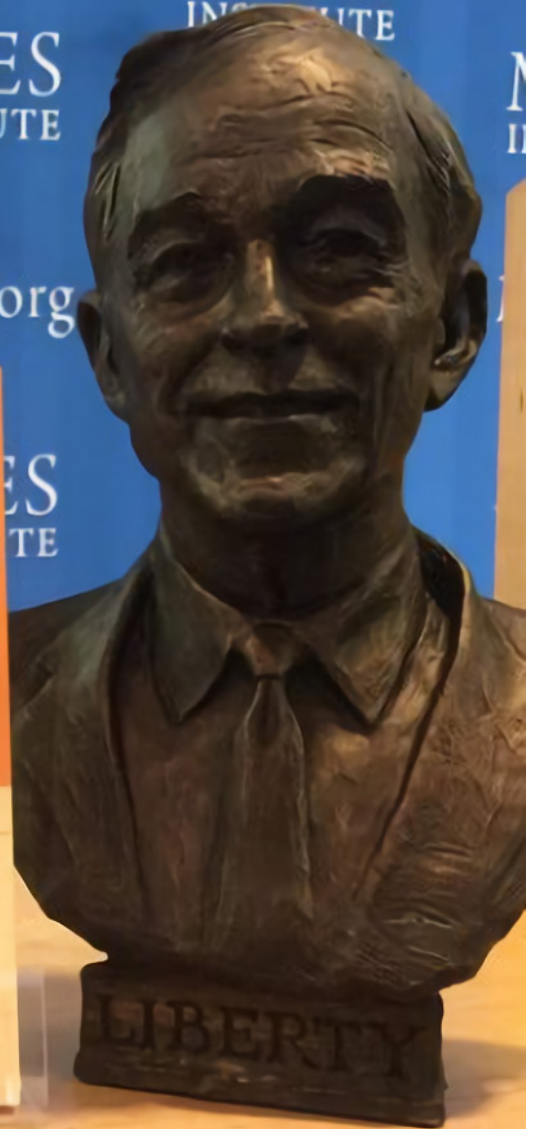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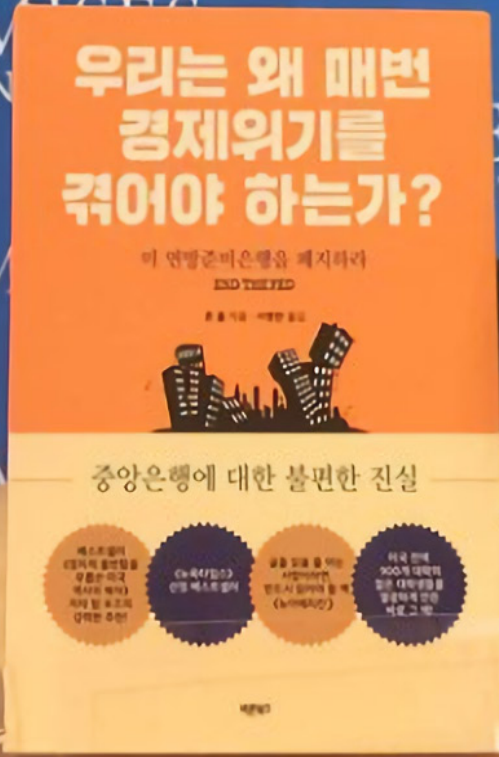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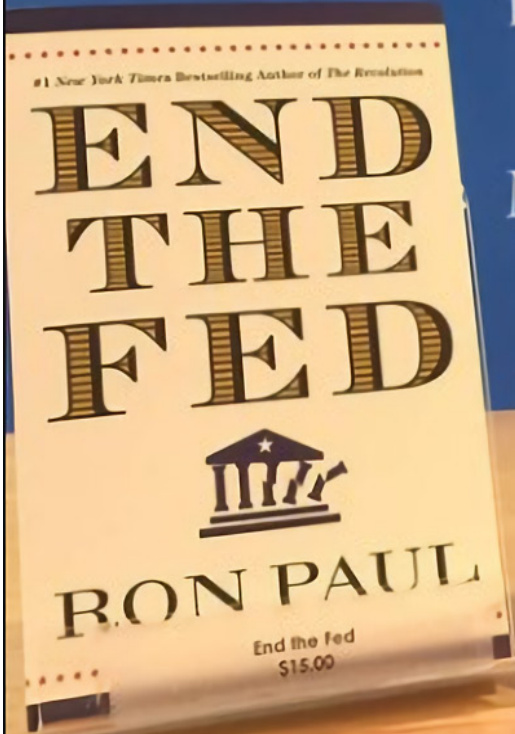
MISES
INSTITUTE

MISES
INSTITUTE

Mises.org

Mises.org

Mises.org



MISES INSTITUTE KOREA

AUSTRIAN ECONOMICS, FREEDOM, AND PROSPERITY



TU NE CEDE MALIS
미제스 연구소 주요 사업

미제스 와이어
자유주의 정론 전파

출판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및
자유주의 도서,
논문, 잡지

아카데미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및
자유주의 연구 및
정론 개발

펠로우십
오스트로-자유주의
학자 양성

OUR MISSION

2019년 9월에 설립된 미제스 연구소는 미제스와 라스바드의 전통의 오스트리아 경제학, 개인의 자유, 올바른 역사관, 국제 평화관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미제스 연구소는 세금과 인위적인 통화가치의 절하, 그리고 강압적이고 독점적인 국가 보호 서비스를 거부하고, 자유 시장 자본주의 경제와 사유 재산 질서를 추구합니다.

OUR PRINCIPLES

미제스와 라스바드는 인간행동에 대한 연역 과학인 인간행동학(praxeology)을 창안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옹호하는 것이며 동시에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문적 방향은 미제스의 인간행동학 토대이며, 신고전학파의 수학적 모델과 가설적인 방법론을 반대합니다.



세부 재정 내역(수입)

1. 미세스 연구소의 수입은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의 프로젝트와는 어떤 연계도 없을 예정입니다.
2. 기부 주 경로는 검로드로 통한 기부와 계좌이체를 통한 기부 두 곳이며, 계좌이체로 통한 기부금은 주로 예산 지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 검로드는 추후 패트리온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패트리온 시스템으로 변경 시 공지하겠습니다.

세부 재정 내역(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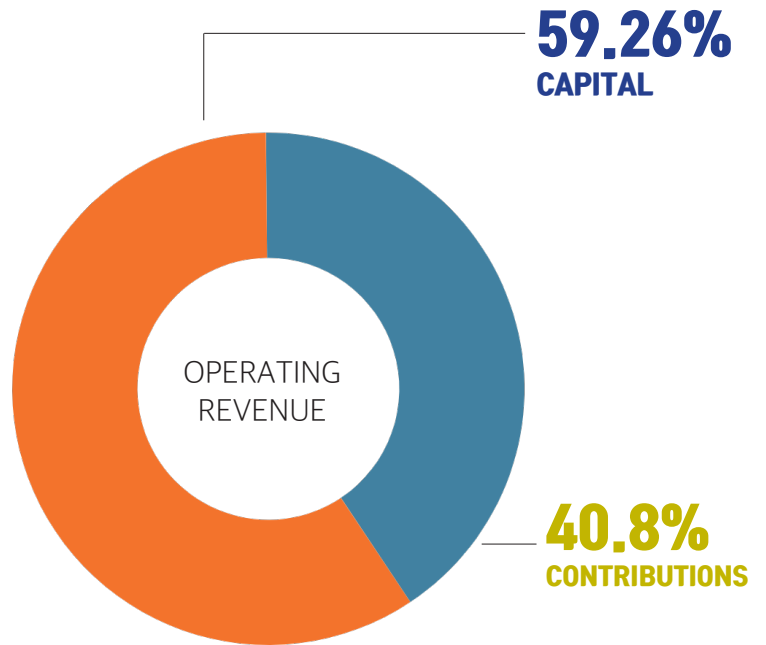
1. 미세스 연구소의 예산 지출은 크게 개발/운영관리/일반으로 나누어집니다.
2. 개발은 카드뉴스 및 명언 제작, 영상 제작, 전자책 및 인쇄물 제작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3. 운영관리는 사이트 유지 및 보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4. 일반부문은 주로 기타 잡부금 및 광고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FINANCIALS

2020년 재정 수입 (원, 달러)

기부금(Contributions)	666,433원 (\$ 603.11)
자본금(Capital)	966,910원 (\$ 860)
Total	1,633,343원 (\$ 1478.14)



2020년 재정 지출 (원, 달러)

개발비(Development)	668,000원 (\$ 604.52)
운영관리(Management)	649,477원 (\$ 587.76)
일반(General)	320,446원 (\$ 290)
Total	1,637,923원 (\$ 1482.28)

